혁신도시 지역사 참여 확대

주 · 토공, 공동도급 가산비율 1%p↑

토공과 주공이 10개 혁신도시 건설공사에 지역소재건설기업의 시공 참여폭을 확대키로 했다.

한국토지공사는 이달 중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기준을 개정, 혁신도시 내 각종 발주공사에 지역업체가 고동도급사로 참여할 때 최고 9%까지 가산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토공은 이 경우 지역소재업체의 공동도급비율이 40% 이상일 때 적용한다.

토공은 현재 지역소재 건설사의 공동도급비율이 30% 이상일 때 지역소재 업체의 가산비율을 8%까지 적용하고 있다.

토공은 이 기준을 8월부터 발주하는 경남과 울산, 경북 등 혁신도시 조성공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주공은 혁신도시 건설공사에 지역소재업체의 공동도급비율이 40% 이상일 경우 가산비율을 현행 5%에서 6%로 1%p 올렸다.

물론 이 같은 혁신도시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공동도급 우대기준은 지역업체만이 참여하는 지역제한 대상공사와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공은 연내 발주하는 경남혁신도시의 대지조성공사부터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토공과 주공은 또 재경부가 공공기관 회계규칙을 개정하는 대로 혁신도시 소재 건설사의 일감을 늘려주기로 했다.

따라서 오는 8월부터 혁신도시의 지역제한 대상공사가 현행 5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으로 확대될 경우 관련 기준을 개정, 발주공사에 이를 반영키로 했다.

주공과 토공은 이어 재경부와 건교부가 지역 소재 건설사의 일감확대를 위해 지역제한 대상공사의 상향조정(현행 50억원 미만 → 70억원 미만) 등을 개정하는 대로 발주공사에 반영키로 했다.

주공과 토공은 건설공사의 경영상태에 신용평가등급을 확대 적용한다.

따라서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는 종전 경영상태 대신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모두 대체된다.

해외플랜트 수주 300억 달러 시대 연다

상반기 187억 달러 … 전년비 73%↑

올해 해외플랜트 공사의 연간 수주가 3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자원부와 한국플랜트산업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해외플랜트 수주액은 187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8억 달

러보다 73% 증가한 것으로 두산중공업이 인수한 해외 자회사 두산 밥콕의 11억 달러 규모 수주물량까지 포함할 경우 상반기 수주액은 198억 달러에 달한다.

산자부는 "이 같은 수주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해외플랜트 수주 목표액 300억 달러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상반기 해외플랜트 수주가 급증세를 보인 것은 오일머니를 활용한 중동지역의 지속적인 발주물량 확대와 인도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의 발전플랜트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쿠웨이트 등 산유국을 중심으로 중동지역에서 전년 동기(31억 달러)대비 3.4배 증가한 106억 달러를 수주했다.

이와 함께 아시아에서도 인도, 싱가포르, 태국 등 전년 동기(9억 달러) 대비 4배 증가한 36억 달러의 수주고를 기록했다.

분야별로 발전 · 담수플랜트 수주가 전년 동기 대비 575% 증가한 70억 달러에 달했으며, 석유화학플랜트는 전년 동기 대비 180% 증가한 57억 달러로 집계됐다.

중동 및 아시아 산유국의 신규 산업시설에 전력공급을 위한 발전소 건설과 원유개발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석유화학시설 수요가 급증세를 보임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금액별로는 1억 달러 이상이 39건에 177억 달러로 전체 수주액의 95%를 차지하는 등 발주 대형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수주기업 규모별로는 전체 수주금액 187억 달러 가운데 대기업이 93%인 174억 달러를 수주했고, 중소기업도 전년 동기(6억7,000만 달러) 대비 약 2배 증가한 12억 달러를 수주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산유국의 산업시설 확충 정책 등으로 플랜트 발주 증가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라며 "향후 해외 플랜트의 지속적인 수주 확대를 위해 해외 발주처 주요 인사를 초청하는 '2007 플랜트 인더스트리 포럼' 행사를 오는 10월 개최하는 등 업계의 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 해외 플랜트 수주실적(5억 달러 이상)

설비구분	수주업체	프로젝트명	발주지역	발주국	발주처명	수주금액 (백만달러)
담수 &발전	두산중공업	4,000Mw급 화력발전소	아시아	인도	Coasta Gujarat Power Limited	1,240
		제벨알리 M1 복합화력발전소	중동	UAE	두바이 수전력청	1,053
		제벨알리 M2 복합화력발전소	중동	UAE	두바이 수전력청	507
	현대중공업	발전담수설비	중동	사우디	Jubail Water and Power Company	1,063
	현대건설	슈바이바 노스 발전담수 공사	중동	쿠웨이트	MEW	710
석유화학	삼성엔지니어링	암모니아 플랜트	중동	사우디	마덴사	950
	대림산업	폴리카보네이트 생산공장	중동	사우디	Saudi Kayan Petrochemical company	1,000
		Esfahan 정유 플랜트	중동	이란	NOICE	700
	GS건설	메탄올 플랜트	중동	오만	살랄라 메탄올사	721
	SK건설	KOC GC-24 Project	중동	쿠웨이트	KOC	624

실적공사비 or 품셈적용 7월부터 지자체 선택에 맞겨

조달청, 계약요청때 표시

7월부터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지자체 시설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적용여부를 지자체가 직접 결정한다.

조달청은 지자체가 조달청에 시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을 요청할 때 실적공사비 적용여부를 표시토록 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자체 시설공사 계약요청 시스템에 실적공사비 적용여부를 묻는 항목을 추가해 이를 직접 표시토록 한 것.

지자체공사의 실적공사비 적용여부는 각 지자체가 자체 기준에 따라 결정해왔지만 조달청을 통한 공사입찰에서는 대부분 실적공사비가 적용돼왔다.

각 지자체별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조달청이 일일이 반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인해 조달청이 입찰을 집행하는 지자체 공사라도 실적공사비 적용여부를 조달청이 아닌 지자체가 직접 결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고 품셈을 적용한 지자체 공사가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조치 이후 현재까지 지자체의 계약요청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실적공사비 비적용'을 요청한 사례도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각 지자체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주요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일정규모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실적공사비를 적용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적공사비는 지자체들이 소규모 공사에도 이를 적용하면서 건설공사 채산성 악화와 지역 중소건설사들의 경영난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같은 지적에 지자체들이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조치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뇌물수수하면 회사 망한다

영업정지기간 2배 동안 입찰 못해

뇌물수수로 영업정지 당한 건설사는 영업정지 기간의 2배에 달하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된다.

작년 광주국도사무소에 처음 적용된 전자계약제도도 건교부와 기타 소속기관으로 전면 확대된다.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청렴도 향상방안'을 마련해 본청 및 소속기관에 일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방안은 건설공사 청렴계약제 개편안과 전자계약제 확대적용안으로 구성되며 건교부 소관 발주공사, 설계 · 감리용역부터 적용된다.

건교부는 먼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건교부 지침)을 개정, 부정한 청탁을 위한 뇌물제공 건설업체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건설산업기본법상 뇌물수수 행위로 영업정지처분을 확정받을 경우 처분기간의 2배에 달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부과하는 것.

1억원 이상 뇌물수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현재는 8개월만 입찰이 제한되지만 앞으로 1년4개월간 입찰자격을 잃게 되는 셈이다.

또 건교부 및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30억원 미만 공사에는 전자계약제가 전면 도입 된다.

현행 서면계약체결 구조상 낙찰사와 발주청 간의 대면접촉 과정에서 부조리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동시에 건설업체 직원의 건교부 및 소관기관 방문과정에 따른 불필요한 인력, 시간, 금전손실도 급감할 것으로 건교부는 기대했다.

현재 1억원 이하 공사 7만원, 1억~10억 이하 15만원, 10억 초과 35만원인 서면계약서 제출과정의 인지대 비용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계약상대자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이의제기 절차 고지를 의무화하는 등 건설업계의 의견진술 기회도 폭넓게 부여한다.

소속기관별 홈페이지에 '이의신

청' 창을 개설 운영하고 발주자와 원하도급업체 간의 의견조정협의체도 신설해 응찰업체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한다는 것.

건설경제팀 관계자는 "발주기관, 건설업체간 대면접촉으로 인해 파생되는 부조리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계약 관련 민원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주공, 하반기 8만가구 발주채비

대전 서남부 등 71개 지구

주공은 올해 하반기 모두 8만여가구에 이르는 아파트건설공사의 발주를 채비한다.

대한주택공사가 내놓은 '올해 하반기 운영계획' 에 따르면 대전 서남부 등 모두 71개 지구에 8만5,946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안양 덕천 등 모두 9개 지구에 9,486가구다.

분기별 아파트 견적물량은 3분기 5만615가구, 4분기 3만5,331가구 등이다.

이들 아파트건설공사 견적계획치는 올해 전체 물량(14만6,161가구)의 58%에 이른다.

주공은 특히 안양 덕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지을 4,276가구의 아파트건설공사를 연내 턴키로 발주하고 나머지 물량은 모두 최저가낙찰방식이나 적격심사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주공은 이 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첫마을사업지구에서 연내 1,662가구의 아파트건설공사를 견적할 예정이다.

이들 공사는 전체 건립예정가구인 7,000가구의 일부 물량이다.

주공의 올해 하반기 택지개발지구별 아파트건설공사 견적물량은 대전 서남부가 5,355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부산 정관 4,142가구 △광명 역세권 3,821가구 △남양주 진접 3,759가구 △오산 세교 3,517가구 △화성 태안 3,357가구 등의 순이다.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별 견적물량은 안양 덕천이 4,276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인천 향촌 3,208가구 △인천 부개 1,062가구 △대전 석촌 1,025가구 등의 순이다.

주공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군포 부곡 택지개발지구 등의 견적물량이 다소 늦춰지는 데다 일부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문화재발굴 등으로 공사집행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하반기 견적물량은 다소 유동적이다"고 밝혔다.

한편 주공은 4분기에 경남과 충북, 제주 등 3개 혁신도시 등에 대지조성공사를 견적, 발주채비를 갖추기로 했다.

▲ 주공 하반기 발주물량

분기	3분기			
월별	8		9	
지구별 가구수	문산 선유4	415	의왕 포일2A-1, 2	1,499
	남양주 퇴계원1	546	의왕 포일2B-1, 2	876
	남양주 진접6, 7BL	2,617	판교공영개발B5-1, 2, 3	300
	남양주 진접	1,142	양산 금산	1,45
	파주 운정1(A18-1)	700	부산 안락3	636
	안산 신길온천1BL	722	인천 부개(재)	297
	안산 신길온천2BL	214	인천 부개(재)	172
	광명역세권A-1, 2	2,294	인천 부개(재)	593

분기	3분기			
월별	8		9	
	광명역세권B-1, 2	1,527	부천 범박	1,473
	양산 평산	1,385	부천 범박	672
	김포 양곡1, 2, 3, 4, 5BL	2,588		
	대전 서남부1BL+4BL,PM	3,315		
	천안 청수	1,456		
	전주 효자5B1, 2BL	1,502		
	정읍 상동2	996		
	광주 진월B2, C2	934		
	광주 지산(재)	376		
	김해 진영	962		
	울산 매곡	720		
월별소계		24,411		7,923
분기 계	53,152			

분기	4분기					
월별	10		11		12	
지구별	화성청계2BL	672	파주 운정A18	1,467	성남 중동3(재)	100
가구수	화성청계4BL	778	파주 운정A17	648	성남 중동3(재)	490
	인천 주안	168	용인 서천 2, 3BL	1,643	화성 태안32, 3BL	1,658
	예산 발연	516	용인 서천1, 4BL	1,382	화성 태안31, 4, 5BL	1,699
	대전 석촌(재)	1,025	판교공영개발B6-1	206	안양 덕천(재)(TK)	730
	김제 하동	79	부산 정관A19, A22	2,207	안양 덕천(재)(TK)	3,546
	영암 용앙	554	청주 성화2BBL	550	부산 고촌B-1BL	474
	해남 해리	304	음성 맹동	261	부산 전포	808
	안동 옥동4BL	612	옥천 장양3	894	부산 정관A-1BL	1,935
	청도 범곡	354	대전 대동(재)	767	김포 양촌2BL	314
	경주 안강	456	대전 목동(재)	100	진천 벽암	632
	경주 건천	443	대전 목동(재)	704	태안 평천2	531
	대구 신천1-2(재)	563	아산 배방	450	첫마을사업	1,662
	대구 신천1-2(재)	785	영광 도동	531	첫마을사업	730
			함양 교산	467	제주 봉개	436
월별소계		7,309		12,277		15,745
분기 계	35,331					

주말 현장 안전관리 '빨간불'

상반기 대형사고 11건 중 6건

주말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구멍이 생겼다.

올 상반기에 발생한 11건의 대형 안전사고 가운데 6건이 토 · 일요일에 발생한 것.

대다수의 건설사들은 현재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주말에는 보통 교대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현장에 투입되는 관리자 수가 평일 전반에 못 미쳐 안전점검 관리에 소홀래 이 같은 경과를 낳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잇따랐다.

또 공사 발주가 턴키 · 대안 방식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영업 전선에 직접 뛰어든 현장소장의 잦은 부재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올 상반기 대형 안전사고 11건을 분석한 결과 주말 사고 발생률이 유달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사고 대다수가 근무자의 작업미숙, 실수 등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기술적 결함에 의한 사고 발생률이 70%에 육박했으며 9건은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공단이 조사분석한 통계치는 건설현장 내 주말동안 적용할 별도의 안전점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주말 건설현장은 어떻기에

대다수 건설사들은 주말동안 교대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공단은 주말 사고 비율이 높은 것은 △교대 근무제로 인한 공사 감독자 부족 △현장소장 부재 때문이라고 밝혔다.

주말에 시행되는 작업도 평일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 건설사마다 2교대 · 3교대 근무제를 시행하다 보니 현장 관리자의 감독 소홀이 사고 발생으로 이어진다는 것.

또 턴키 · 대안 방식의 발주형태가 늘어 건설현장 소장들이 직접 평가위원 등을 찾아다니느라 현장을 비우는 일이 잦아 사고 발생률이 높다는 얘기다.

정작 시급한 문제는 건설사들이 주말 사고 발생률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기를 맞추기 위해 여전히 적은 인원을 투입, 주말에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별다른 대책 마련에 고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즉 촉박하게 짜여진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해 대다수의 건설사들이 위험을 안은 채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A건설업체 현장 감독자는 "공단의 주장대로 주말에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력 투입비용, 공기 지연, 기계 리스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면 현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1 · 2분기 대는 동절기 동안 미워뒀던 공정이 급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사고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주형태의 변화와 사고 발생은 무관하다는 반론이 있었다.

B건설사 관계자는 "주5일근무제 시행 이전에도 주말 사고 발생률은 평일보다 높게 나타났다. 건설현장 작업자들은 남들이 쉴 때 일하는 생활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주말동안 평일과 같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힘들다. 이로 인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소장이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감독하지 않는다"며 "수주 형태변화를 주말 사고 발생률이 높아진 것과 연관짓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사고 발생률을 줄이려면

한국산업안전공단 관계자는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인원을 더 투입해 사고를 막으려는 경영자들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건설업체들이 중대한 사고와 연결될 수 있는 작업을 진행하는 주말의 경우 인력을 평일처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동적인 인력 투입시스템을 구축해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더고 했다.

전문가들이 밝히는 주말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밖에도 △철저한 인수인계 △작업자 안전의식 고취 △작업 근로자 몸상태 점검 등을 꼽았다.

한편 공단은 건설현장 재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호주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위험성 평가'를 개발, 발주처와 건설사의 시행을 유도하고 있다.

위험성 평가란 건설현장에서 시행하는 공정방법, 감독자, 주의할 점 등을 서류에 조목조목 밝히는 것인데 자칫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다 여전히 업계의 관심이 적어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체는 주말에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는 것을 알고도 적절한 대응책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도외시한다면 후에 대형 사고 발생 야기는 물론 사고 발생 위험을 알고도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문업체, 해외진출 '동반' 보다 '단독' 이 유리

해외기반이 취약한 전문건설업체가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으로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의 독자적인 진출이 해외시장의 성공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체는 해외시장에 초기 진출할 때 정보 및 인적 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인해 일반건설업체와 동반진출을 모색해 왔다.

경험부족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데다 안정적인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

그러나 최근 현지법인 설립 등을 통한 독자적인 진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대기업과 동반 진출할 경우 리스크 감소 등 장점보다 기대수익 감소, 경험축적 및 추가 수주가 어려운 단점이 더 크다는 것이다.

또한 해외공사는 국내 공사와 달리 대기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점도 독자 진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독자 진출로 해외시장에 자리 잡게 되면 추가 수주를 모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전문건설업 특성상 단순공종과 단기간 공사이기 때문에 현지 시장조사와 견적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지 시장조사 부족으로 해외공사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한 만회가 불가능하고 이는 회사 기반을 흔들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전 철저한 시장조사와 세밀한 견적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현지에서 수행키 어려운 공종에 진출해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충분한 기술력과 장비를 보유한 공종에 진출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전문건설사들도 해외시장에서 먹을거리를 찾고 있다"며 "전문공종에 대한 장점을 최대한 살려 독자적으로 진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함께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약과 음료

노스캐롤라이나대학의 와킨스(Paul Watkins)박사에 따르면, 자몽 주스나 오렌지 주스를 고혈압 치료제, 콜레스테롤 치료제, 진정제 등과 함께 마시면 약효가 거의 2배로 강화된다. 약 복용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초래해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다. 탄산음료를 약과 함께 마셔도 약이 위에서 미리 녹아 약효가 강화될 수 있다. 또, 소화제나 제산제를 복용할 때는 우유나 요구르트 등의 유제품을 섭취하지 않는 게 좋다. 유제품에 든 칼슘이 약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건강상식사전」 中에서